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

(배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82
----------	------

발의년월일 : 2020. 12. 04.

발의의원 : 배지숙, 김재우
김태원, 이시복
이영애, 강성환
김성태, 김지만
송영현, 안경은
윤기배, 임태상
홍인표, 황순자
의원(이상 14명)

1. 제안(제정)이유

- 가.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나. 감염병·화재·사고·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긴급지원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긴급지원의 종류와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라.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 마. 위기가구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10조)
- 바. 긴급지원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계곤란,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여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사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하의 가구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등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급여를 우선 연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발굴·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현물 지원

나. 주거지원: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비용 및 현물 지원

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사회복지기관·단체 및 민간구호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낸 경우에는 대상자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상자 선정 심사
3. 구청장·군수의 추천자에 대한 심사
4. 민간구호기관·단체 등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사
5. 그 밖에 긴급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의 긴급지원업무 담당 과장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
3. 대구광역시 구·군의 긴급지원업무 담당 과장
4. 협력 민간단체·시설의 임직원
5.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관련 분야 대학교수
6.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관계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 또는 재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절차 등)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 및 조사, 지원, 이의신청,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기관의 종사자와 생활업종 종사자 등에게 활동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민간구호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대상자의 위기상황 조사·확인 및 지원 등 필요한 경우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12. (생략)

[전문개정 2010. 6. 8.]